

건설사들 공사비 증액 요청, KT는 'NO'... 업계 "법 개정 필요"

롯데·쌍용·현대 등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급등 공사비 증액 불가" 발주처 KT '물가변동 배제 특약' 이유 거부... '법인vs 법인' 갈등 장기화

통신 대기업인 KT와 대형 건설사들 간의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등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발주처인 KT는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는 롯데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등과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다. 먼저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 중인 롯데건설은 발주처인 KT에 1000억원대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KT 측에 알렸으나, KT 측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따라 공사비 증액 지

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양1구역 재개발은 KT가 보유하고 있던 옛 전라북도 부지 일대 50만5178㎡에 광진구청 청사와 구의회, 보건소, 호텔,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난해 청약 경쟁을 98대 1을 기록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1063가구)'도 포함돼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사업장엔 롯데건설 외에도 200여개의 하도급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비용 부담으로 공사를 중단에 포기했고 3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준공이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과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막대한 채무 인수 부담은 모두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감당해야 한다.

쌍용건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완공한 KT 판교 신사옥 관련 공사비 초과분을 놓고 KT와 분쟁 중이다. 2020년 계약 체결 당

시보다 원가가 크게 오른 만큼 공사비를 171억 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KT가 답변을 내놓지 않아 지난해 10월 31일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형건설사가 대기업 발주처를 상대로 장외시위에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달 12일에도 광화문 사옥 앞에서 2차 시위를 벌일 계획이 있지만 KT 측이 협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시위는 연기된 상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신공영은 부산초량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해 140억원 증액을, 현대건설은 서울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 관련 300억원을 증액 요청했지만 KT는 모두 거부했다.

쌍용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또한 롯데건설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발목을 잡혔다. 이 특약은 물가가 상승해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불공정한 관행"이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쌍용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등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나 위원회에서 조정을 권고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KT가 돌아서지 않는 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익

명을 요구한 한 건설 전문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은 사실 쉽지 않다"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려면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정부 입장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 해줘라' 수준의 권고가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은 공익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국회의원들이 선뜻 발의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KT 최고 결정권자가 특별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결정해도 이사회에서 배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 "사기업인 KT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함과 건설사와의 관계는 조정의 여지가 있으나 법인과 법인간의 계약은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만약 법정 싸움까지 간다고 해도 건설사들이 패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건설사와 KT간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 이유다. 문용근 기자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국제오토쇼에서 열린 '2024 월드카 어워드(WCA)'에서 최고 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World Car of the Year-WCOTY)'를 수상했다. EV9는 '올해의 전기차'로도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차 아이오닉5 N. 현대차 제공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마존의 광고 관련 데이터 공개를 27일(현지 시각)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

"EU 이익이 아마존 물질적 이익보다 우선" 아마존 광고 관련 데이터 공개 최종 확정

아마존, 유럽 디지털서비스법 소송 패소 유럽사법재판소, 법원 임시조치 뒤집고 기가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익보다 우선된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광고 관련 데이터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 플랫폼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기존 원칙을 뒤집고 자체적으로 고객 정보를 남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을 못박은 것이다.

ECJ는 27일(현지 시각) 아마존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일부 규정인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제공' 의무를 유예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인 EU일반법원은 지난해 9월 아마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시조치를 내렸는데, EU집행위원회가 항소한 사건에서 ECJ가 이를 뒤집었다. 글로벌 플랫폼 산업에서 소외된 유럽의 미국 빅테크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소송과 규제의 형태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CJ는 아마존의 의도대로 EU가 임시조치를 허용할 경우 초래되는 위험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무 유예는 DSA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년 동안 지체시킬 수 있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온라인 환경이 지속되거나 더욱 발전하도록 허용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8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글로벌 IT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DSA를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플랫폼이 가짜 뉴스와 같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면 제재를 받는다. 플랫폼은 차별적 콘텐츠나 학대·테러 콘텐츠, 사용자를 속여 구매와 가입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미성년자 대상 광고 등도 의무적으로 검열하고 제거해야 한다.

벌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6%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벌금 상한을 낮춰서 적용한다. 아마존은 이 법상 VLOP로 지정되자 작년 7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EU일반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또 VLOP 지정에 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공개 규정에 대한 의무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아마존의 VLOP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27일 ECJ의 판결에 따라 아마존은 VLOP로 지정된 21개 기업들

과 함께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아마존은 판결 직후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아마존은 VLOP의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다. VLOP로 지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U가 VLOP로 분류해 최고 강도로 규제할 기업은 총 22개다. 페이스북·틱톡·X·유튜브·인스타그램·링크드인·핀터레스트·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 업체,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사와 관련된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DSA 시행 이후 맞춤형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는 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끌 수 있다. DSA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와 데이터에 의해 표시되는 콘텐츠를 더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알고리즘 추천이 제한되면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가 아닌 일반적인 콘텐츠가 더 많이 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극단적인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는 원인요인에서 벗어나 공통 원리를 보고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해악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경제 주도가 더욱 굳건해지자 유럽은 DSA, DMA, AI법, 데이터법을 통해 구글·메타·애플·아마존 등에 대한 공정성 규제와 이용자 보호 규제를 내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대형 플랫폼의 책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설계됐고 동시에 EU 내 플랫폼 시장을 삼킨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자국 기업 보호 법안'의 성격도 띠고 있다.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는 유럽에선 DSA, DMA 등 강력한 플랫폼 규제법이 도입해도 유의미한 타격이 있진 않다.

앞서 25일에는 EU집행위원회가 구글·애플·메타 등 3개 기업이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6개 게이트키퍼 중 아마존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으나 EU는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 장터에서 자체 브랜드를 직접판매 브랜드보다 더 유리하게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가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ECJ의 판결을 통해 EU의 빅테크 기업 압박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서방 당국의 반독점 규제가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 고객 정보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없던 상황에서 고객 정보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해외에서는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좋잖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믿는 구석이 생겼다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누구나 전화나톡으로 똑똑!

투자자 목적/ **개비증권**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향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출금되며, 프라이빗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빗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